

국회 증인 출석의무 강화된다

김관영 의원 대표발의 '우병우 소환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출석요구 공시송달로 할 수 있어

국회에서 요구한 증인 출석의 의도적 회피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2016년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당시 우병우 전 민정수석 등은 국회 출석요구서를 송달 받지 않는 방법으로 증인 출석을 거부한 바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전북 군산)이 대표발의한 '국회에서의 증인 및 감정예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증인이 출석요구서 수령을 기피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을 할 수 있게 된다. 공시송달은 민사소송법을 준용해 관보·신문 게재 등을 통해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하는 제도다. 그동안에는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국정조사·국정감사·청문회 등 한정된 기간 동안 증인의 소재 파악이 안 되면 국

회 출석 요구서를 전달할 방법이 없었다. 핵심 증인의 증언을 듣는 것이 중요함에도 법의 허점으로 증인이 고의로 국회 출석을 피할 수 있었던 셈이다. 새로 시행되는 국회 증감법에는 제5조의 3이 신설됐다. 공시송달 대상과 그 방법을 명문화한 게 골자다. 공시송달은 국회게시판·관보·국회공보·일간신문·전자통신매체 등을 통

해 공시한 후 7일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의 증인 출석 의무가 강화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과거에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처럼 국회의 출석 요구를 고의적으로 회피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었다"며 "이번 법 개정으로 핵심 증인들의 국회 출석 거부를 제한해 국민 알권리가 폭넓게 보장될 바란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행안부, 봄철 산불예방 특교세 84억 긴급 지원

행정안전부는 최근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위험이 증가함에 따라 지자체의 산불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교부세 84억원을 긴급지원한다고 지난 30일 밝혔다.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산림연접지 인화물질 제거, 산불감시초소 정비, 산불감시활동과 산불예방홍보 등 산불예방에 사용될 예정이다.

대형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강원과 경북에 헬기진화용수 확보를 위한 담수시설(30억원, 개소당 15억원)을 지원한다. 또 지난 28일에 발생한 강원 고성산불 수습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억원을 별도로 교부한다.

그동안 행안부는 효과적이고 신속한 산불진화를 위해 산림청, 소방, 군부대 등과 '산불대응 정책협약'을 구성, 헬기공조진화과 인력동원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오고 있다.

또 농산폐기물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 행위 금지, 산불원인지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산불예방을 위하여 산림청, 지자체 등과 함께 협력하고 있다.

행안부에 따르면 올해 2월까지 산불발생 123건, 피해면적 211ha로 전년 동기대비(65건, 8ha) 발생건수는 2배, 피해면적은 25배에 달했다. 또 최근 건조특보지역이 확대되고 있고 청명·한식(4월5~6일)을 전후해 성묘객 증가, 영농준비 소각활동 등으로 인해 산불발생 가능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건조한 봄철은 어느 시기보다 산불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소중한 우리의 산림자원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전예방 활동과 대응 태세 구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뉴시스



국회 본회의 열려 지난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제35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가 열렸다.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4월 2일 출범

공동교섭단체 등록대표는 양당 원내대표 2개월마다 교체

민주평화당과 정의당 간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 4월 2일 출범할 예정이다. 공동교섭단체 대표는 양당 원내대표가 공동으로 맡되 등록대표는 2개월씩 번갈아가 맡는다. 장병완 원내대표는 지난 30일 오전 대전 서구문화원에서 열린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다. 장 원내대표는 "다만 4·5월에는 임시국회와 개헌협상 및 남북·북미 정상회담, 지방선거 등 중요 정치일정이 몰려있는 점, 6·7월은 임시국회가 없는 점, 후반기

개헌협상 등을 고려해 두 번째 교섭단체를 맡게 될 당은 6~8월, 3개월을 맡기로 했다. 이후 정기국회는 2개월씩 교대로 담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교섭단체 명칭은 두 번째 등록대표를 맡게 될 당명을 먼저 쓴다. 이런 원칙하에 평화와 정의 모임이 됐고, 4~5월 등록대표는 정의당이, 6~8월은 평화당이 맡기로 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장 원내대표는 "교섭단체는 각 당의 정체성을 구속하지 않는 구호존이(求可存異·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 원칙하에 운영될 것"이라며 "개헌·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선거제 개편, 한반도 평화체제 정착, 노동과 농업 가치의 인정을 비롯한 양당의 지향점 등을 같이 추진하고, 정체성이 서로 다른 부분은 각 당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형태"라고 강조했다. 장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이같은 공동교섭단체의 운영방식이 다당제 체제가 지향할 정당 간 협치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실한 대"며 "(정의당 인준절차가 마무리되면) 4월 2일 교섭단체를 등록하고 오전 11시30분 국회 245호에서 양당 의원 상견례를 갖기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시스

靑, 남북정상회담 의제 공감대... '북, 이의 안 달아'

청와대는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의제가 확정 단계는 아니지만 우리 측이 제시한 의제에 북측이 이의를 달지 않았다고 밝혔다. 후속 고위급 회담에서 의제를 조율하기로 했지만 이미 남북이 의제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앞서 우리 측은 이번 정상회담의 3대 의제로 ▲한반도 비핵화 ▲회기적인 군사적 긴장 완화를 포함한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 관계의 새롭고 담대한 진전을 제시한 바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은 우리 정부 의제안을 밝히며 "어제 고위급회담에서 북측이 (의제) 이야기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았다"면서 "그 것만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진전이 있지 않았느냐고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의제를 합의 보지 못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북측의 정치적 문화 때문"이라며 "중요한 의제 문제를 지도자가 결정할 문제이지 실무 차원에서 논의할 사안이라고 한다. 이에 의제를 '남북정상회담 4월 27일 판문점 개최'처럼 명백히 합의를 못한 것이다. 이 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 판문점 북측 통일각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정상회담 날짜와 실무 부분 협의안 이뤄지고 의제 조율이 빠졌다. 양측은 다음달 열리는 차기 고위급회담에서 후속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한반도 비핵화' 의제 명시를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조명균 장관은 전날 고위급회담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제 관련 "그런 것들은 정상 간에 앞으로 논의될 사항이다. 이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충분히 협의해서 구체적인 표현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며 "북측도 우리와 크게 생각이 다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자문위원인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정상회담 의제는 예상하는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여러 통로, 불발접촉을 통해 논의될 전망"이라며 "어제 고위급 회담은 첫 만남이었던 것만큼 정상회담 장소와 시기부터 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국방부, 올해 군무원 1285명 선발... 51% 증가

국방부는 올해 1285명의 군무원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이는 전년 채용인원 대비 51%가 증가한 수준이다.

국방부와 육·해·공군본부는 2018년 군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이날부터 채용기관별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는 육·해·공군 5급 이상과 국방부 직할부대 기관 전체 계급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하고, 각 군은 6급 이하의 군무원 채용시험을 실시한다.

올해 군무원 채용인원은 총 1285명으로 공개경쟁채용(공채)시험을 통해 7급·9급 1006명을 모집하고, 경력경쟁채용(경채)시험을 통해 3~9급 279명을 모집한다.

이는 2017년 채용인원인 849명과 비교해 51%(436명)가 증가한 규모로 무자격 의무병 대체인력 122명, 육군 군수지원 여단 개편 인력 66명, 무기체계 전력화에 따른 장비인력 보강 소요 17명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또 국방부는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해 작년 모집인원 대비 약 60%(48명)가 증가한 135명을 '장애인 구분모집'으로 채용할 계획이다.

원시접수는 오는 6월7일부터 시작하고, 채용기관별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되며, 자세한 사항은 국방부 군무원정책과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필기시험은 전국의 시험장에서 8월11일 시행되며, 필기시험 합격자는 면접시험과 신원조사 등을 거쳐 최종합격자로 확정되면 내년 1월1일 이후 임용될 예정이다.

한편 올해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는 처음으로 한국사 과목이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돼 시행된다. 수험생은 원시접수 마감일까지 계급별 기준 등급에 해당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성적을 보유해야 시험 응시가 가능하다. /뉴시스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구독·광고문의 288-9700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